

로펌 압색에 뿔난 변협... 변호사 비밀유지 강화법 추진

대학가 소식

한성대 교사 초청 대입 컨퍼런스

한성대학교는 11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소재 롯데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수도권 120여개 고교 240여명의 진로·진학 부장과 담당 교사를 초청해 '2019년 교사 초청 입학전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2020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비해 수도권 지역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성대 입학 전형을 안내하고, 대학 입학 담당자와 고교 교사와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대입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에서는 ▲명지고 박재준 교사(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 대학1팀장)의 '중위권 학생을 위한 적성고사 대학별 입시전략' ▲한성대 김태훈 입학사정관의 '한성대 입학전형 결과 및 트랙제도 안내' ▲한성대 황태희 학생(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문학문화콘텐츠트랙)의 '야간학부 입학생의 대학생활 소개' 등이 이어진다.

김대중 세종대 교수

국제학술대회 논문서 "세계 무역전쟁, 韓 기회"

한국의 대 중국, 대 일본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대 경영학 부김대중교수(사진)는 지난달 29일 홍콩폴리텍대학에서 한국국제경영학회(회장 김동순 중앙대 교수)와 국제경영관리학회(회장 김주태 단국대 교수)가 공동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세계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제의 논문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간의 통상분쟁으로 한국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교역시장을 다변화 하고,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에 가입해 무역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약 80%에 이르고, 주요 교역 상대국의 국가별 비중은 중국(33%), 미국(10%), 일본(7%) 순으로 높다. 김 교수는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2%로 낮추고, 일본에 대한 반도체 부품과 소재 산업의 의존도 역시 90%에서 30%까지 낮춰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수입처를 미국과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고, 국내 소재 산업육성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수 기자

변협, 변호사 법 개정 토론회 예외 해당하는 규정 삭제 추진 해당 규정 근거, 침해 문제 찾아 '비밀유지권 명문화 입법' 주장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연이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 수색'이 계속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현행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10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변호사법 26조에 의뢰인(피의자)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대화나 법률 자문 내용은 수사기관이 묻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제시한 개정안에는 비명문화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손현경 기자

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변협은 이날 변호사법에서 예외에 해당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예외 규정에 근거해 비밀유지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서 직무와 관련해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해 의뢰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 ▲변호사가 의뢰받은 직무와 관련해 작성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는 '누구든지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발제를 맡은 한애라 성균관대 교수는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무만 있을 뿐 명확한 권리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다"며 "비밀공개에 대한 법원의 명령 등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없다면 비밀 유지의무를 사실상 지키기 힘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다수 국가에선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이 명문화돼 있다"며 "미국 연방증거규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상담·조언 내용을 원칙적으로 증거로 압수할 수 없다. 독일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법률 자문 내용도 증거로 쓰

산학협력 기술이전 수입료 국민대 57억... 전국 '1위'

기술이전 전담조직 신설 주요

국민대가 지난해 산학협력 분야 기술이전 수입료로 57억여원을 벌어들여 국내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30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대학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대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의 회가 공개한 '2019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술이전 수입료란 대학이 연구를 통해 획득한 성과와 기술을 기업에 이전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실제로 입금된 실 수입료를 기준으로 한다. 기술이전 수입료는 대학의 연구 역량과 산학협력 우수성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지표로,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이나 대학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국민대의 2018년도 기준 기술이전 수입료는 57억8477만원으로 2위 성균관대(50억1551만원), 3위 서울대(42억

2688만원) 성과를 훌쩍 넘어선다.

이 같은 성과는 국민대가 지난 2014년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기 위해 기술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인 기술이전센터를 신설해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기술이전센터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하고 제품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교수와 학생의 실험실 창업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대가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IP-R&D 전략지원과 발명 인터뷰-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으로 이어지는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한용수 기자 hys@

웅진씽크빅 '키즈빌리지 플레이도시점' 오픈

에듀테크 전문기업 웅진씽크빅은 경기도 부천웅진플레이도시에 어린이 에듀테인먼트 시설 '키즈빌리지 플레이도시점'을 그랜드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웅진씽크빅 키즈빌리지는 어린이들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돕는 체험형 놀이 공간이다. 연령별·주제별 큐레이션 된 웅진씽크빅의 다양한 전집 도서와 학습지를 한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

다. 전용 북패드를 활용한 스마트 독서·학습 융합 서비스인 '웅진북클럽'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 e-북, 교구 무료 체험도 가능하다.

키즈빌리지는 매일 11시~19시까지 운영되며, 웅진씽크빅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비회원의 경우 현장에서 무료 체험 신청 후 입장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수능 시험 치듯이...' 2019학년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일인 1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일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연협뉴스

"제로섬 아닌 '윈윈 교육협력체계' 구축을"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취임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신임 하윤수 회장(사진)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하 신임 회장은 앞서 지난달 20일 전체 회원 대상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2년 6월까지 3년이다.

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념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생의 교육협력체제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갈수록 정치적 이념 개입으로 백년대계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수월성과 평등성 교육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것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교육공



동체 간 교육적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첨예한 이념적 대결 구도로는 미래교육을 향해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며 "교육주체와 각계각층이 정치적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쪽은 가지고 다른 한쪽은 빼앗기는 제로섬이 아닌 상생의 윈윈의 교육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권과 이념을 넘어서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초당적·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